

북한의 경제변화와 전망

현동일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원장)

- I. 서론
- II. 북한의 새로운 경제변화
- III. 향후 북한경제 전망
- IV. 결론

〈요약〉

본 논문에서는 2012년 북한 김정은체제가 들어오면서 북한경제 변화를 두개 방면으로 서술하면서 향후 북한경제를 전망해 보았다. 북한 경제변화를 정책적인 측면과 경제성과적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에서는 특구개발구 확대신설, 기업 “관리방식조치” 시험실시, 농촌분조관리책임제(포전담당제) 도입실시와 경제관린통제권 내각귀속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경제변화 성과 부분에서는 2013년 북한 GDP 총액은 249.98억불, 2014년에는 261.32억불, 인구당 GDP 1,013불로서 전년대비 7.5% 증장, 2013년 식량생산량은 566만톤, 2014년 571만톤 등 경제적인 수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향후 전망에서는 경제강성국가에 내포되어 있는 세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전망을 세 가지 측면으로 추정해 보았다.

I. 서론

오랜 세월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신비로운 면사에 드리워 다른 사람들이 그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 주요 이유는 첫째로는 정보공개 채널이 너무 협소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북한은 종래로 통계자료를 대내외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북한의 대부분 정책들은 문건으로 작성되어 공포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영도자의 연설과 담화들에서 표현되고 풀이된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북한 전 지역 내 자유로운 지역적 유동이 통제되고 있고 외국인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 4년간 북한의 변화를 객관적이면서 비교적 정확하게 해독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고 해독해 내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 20년간 북한은 줄곧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유례없는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향후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자기식 대로 계속 변화와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가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변화속에서 제재 외에 다른 해결책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2012년 김정은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지역에서는 조용히 변화의 조짐을 보여왔다. 북한변화의 중심에는 경제강성국가건설이라는 이슈가 공식 등장하면서 대외교류 대폭확대(개방이 아닌 개방), “경영관리

방식”개선(개혁이 아닌 개혁)이 시작되었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탄생 100주기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새로운 세기 산업혁명의 불꽃을 지펴 경제강성대국건설의 길로 나가자!”라는 연설을 하였다. 4월 19일 김정은제1국방위원장은 노동신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민생활개선을 위한 경제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변을 이룩하자”라는 연설을 발표하였다. 현재 국제사회 일부학자들은 이 두개 연설을 김정은집권 근 4년간의 북한대내정책기본기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 김정일국방위원장시대 선군정치 기치 하에 “강성대국전략(1999년)” 실행 중심을 국방건설(핵무장)에 두었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선군정치 기치 하에 “강성대국전략” 중심이 서서히 인민생활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강성대국 건설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북한은 “핵무장과 경제병진”노선을 선포 하면서 국제사회 지속적 비난을 받아왔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계속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인민생활개선과 향상을 둘러싸고 경제희생과 재건을 위하여 유례없는 개선 조치들을 실험실시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도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II. 북한의 새로운 경제변화

2011년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12.18 그룹바(전문가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파견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의 부동한 경제발전 모델과 경험을 수집하여 북한경제 회생과 재건에 참고성적인 지문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2012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아래와 같은 두가지 방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1) 특구개발구 확대신설

개성공단, 금강산, 나선특구에 이어 2014년 6월에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구(원산, 금강산, 마식령, 문천시와 주변 7개군 일부지역을 통합(개발총면적, 436km²)) 지정하였고 7월에는 신의주 특구(신의주 지구, 신의주시중심지역을 포함하여 마전동, 당적동, 남민리, 대계도 지구; 대계도를 중심으로 신도, 임도, 다사도(개발총면적: 63km²))를 지정하였다. 2013년 5월 “개발구법”을 제정하였고 각 도 산하 13개 개발구를 지정, 2014년 6월 6개, 2015년 2개 추가로 지정하였다. 현재 총 6개특구와 21개 개발구를 설정하였다. 개발구는 (1) 공업개발구, (2) 농업개발구, (3) 관광개발구, (4) 수출가공구, (5) 고신기술개발구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특구와 개발구설립의 주 목적은 첫째로 비록 제한되어 있지만 일종 “개방”의 시험으로 볼 수 있고 둘째로 외국투자유치라고 할 수 있고, 셋째로 북한식(우리식) 발전모델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2012년 5월과 2014년 5월 평양에서 대형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몇 년간 줄곧 중국의 베이징, 창춘, 다롄 등지에서 투자설명회와 상품전시회 등 행사를 진행하여왔다. 특히

나선지역의 경우 2012년부터 공식등록된 외국기업이 50여개 늘어났고 외국계은행도 5개 등록되어 있으며 2014년 6월까지 나선지역 외국 투자총액이 4.1억 유로에 달한다.

(2) 기업 “관리방식조치” 시험 실시

2013년부터 북한에서는 우리식관리방식 개선이란 명분하에 기업에게 “독립채산권”을 부여하는 개선조치를 시험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로부터 하달하던 계획지표들을 대폭 축소하고 동시에 기업이 시장을 상대로 독립자주적으로 경영하는 지표를 늘였다는 것이다. 동시에 상황에 따라 정부지표를 기업지표로 전환시킬 수 있다. 둘째로 정부는 기업에 최저한도의 자금과 물자만 조달하고 기업소는 제품판매 이윤을 정부와 나눈다는 형식이다.

기업은 나눈 이윤을 확대재생산에 투입할 수도 있고 종업원의 노임 향상과 기타복지에도 쓸 수 있다. 북한측 소개에 따르면 “관리방식 개선” 조치를 선행시험 실시한 기업들은 엄청난 효율상승효과와 노임 상승효과를 가져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분야에서의 노동자들의 월노임을 4,000원대로 보면 관리개선을 실시한 분야의 노동자들 월노임은 20만~30만, 개별적 분야는 50만원에 달한다고 전한다. 일부 중국학자들은 “관리방식개선” 조치를 지난 80년대초 중국 국유기업의 “확권양익(扩权让利)” 개혁과 흡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측 소개에 따르면 2014년부터 특수업종을 제외하고는 “관리방식개선” 조치를 전면적으로 확대보급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3) 농촌분조관리책임제(포전담당제) 도입실시

2013년부터 북한협동농장들에서 “분조관리책임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의 확대를 거쳐 현재는 전지역에 포전담당제를 보급시켰다. “분조관리책임제”의 구체내용을 들여다 보면 형식상에서는 원래 10~20명으로 구성된 분조형태를 줄여 적게는 3~5명으로 구성하고 어떤 분산거주마을에서는 심지어 두개 농호를 분조를 구성시켰다고 한다. 내용상에서 보면 분조를 단위로 노동량을 기입하고 노동성과를 계산하며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포전담당” 책임제로도 할 수 있다. 분조관리책임제 도입 목적은 첫째로 농민들의 노동적극성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농민들의 노동과 노동성과물을 더욱 긴밀히 결합시키는데 있다. 북한측 관련기구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3년 “분조관리책임제” 실험실시 중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 2개 농가를 분조로 한 시험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분조관리책임제의 특징은 두개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노동효율증대이고 여기에 따르는 양식 생산량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분조단위의 노동성과와 분배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데 있다. 이것이 농민들의 분배수익과 직접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의 “분조관리책임제(포전담당제)”는 중국 농촌에서 지난 80년중기 정착된 농가중심경영방식(包产到户, 包干到户)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80년대 초 “연산책임제(联产责任制)”에는 상당히 접근된 변화로 볼 수 있다.

(4) 국가경제통제권 내각에 집중(국민경제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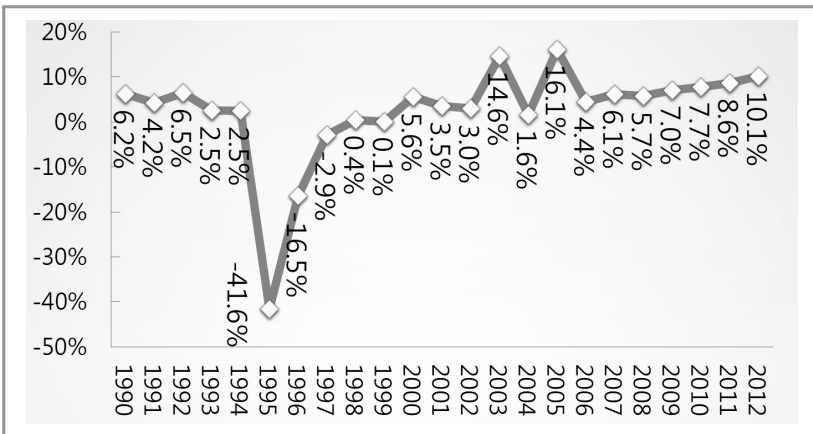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북한경제는 급속한 하락세를 보여왔다. 계획 경제제도를 뒷받침하는 공급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생겨났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경제”와 “군부경제”, (특수경제)가 등장하면서 북한경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 북한경제는 “내각경제(정부경제)”, “당경제(특수경제)”, “군부경제(특수경제)”, “시장경제” 등 4개 부분으로 분리되어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민경제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국면을 바로잡기 위하여 4월 6일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경제강성대국의 실현과 인민생활개선의 혁명적 전환을 위하여 경제사업에 관계되는 모든 권한을 반드시 내각에 집중시켜야 하며 철저하게 내각의 통일영도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규칙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란 강화를 발표하였다. 이 강화를 계기로 원 군부 소속에서 효익성이 가장 좋은 5개 광산(생장광산, 남계광산, 대흥광산, 룡양광산, 쌍룡광산)과 4개 가공기업(성진내화물공장, 대흥마그네시아크링카분공장, 룡양마그네시아크링카분공장, 단천마그네시아크링카공장)을 1차적으로 내각산하로 귀속시킴으로서 국가경제통제권을 내각에 집중시키는 전환을 시작하였다. 국민경제통제권확립을 위하여 2013년 3월 개각을 실시하여 경제통으로 불리우는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임명하여 새로운 경제관리개선과 경제관리부서를 조정 강화시키고 모든 “경제관리개선”조치들을 내각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왔다. 북한측 소개에 따르면 현재 내각에서는 수시로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관리개선”조치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을

연구하고 시험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이룩한 경제성과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에서 언급한 정책적 변화의 힘입어, 경제건설 분야에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북한 전 지역 생산성기업과 농촌지역에 유례없는 기업의 생산증대 고조와 노동자들의 노동적극성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013년 북한 GDP 총액은 249.98억불, 2014년에는 261.32억불, 인구당 GDP 1,013불로서 전년대비 7.5% 증장, 2013년 식량생산량은 566만톤, 2014년 571만톤, 2015년에는 전년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2014년도 국가 예산은 예산수익 2조5억9,700만원(북한화폐), 예산지출은 2조4억3,410만원(북한화폐)로 전해지고 있다.

〈그림 1〉 국가예산증장률(1990~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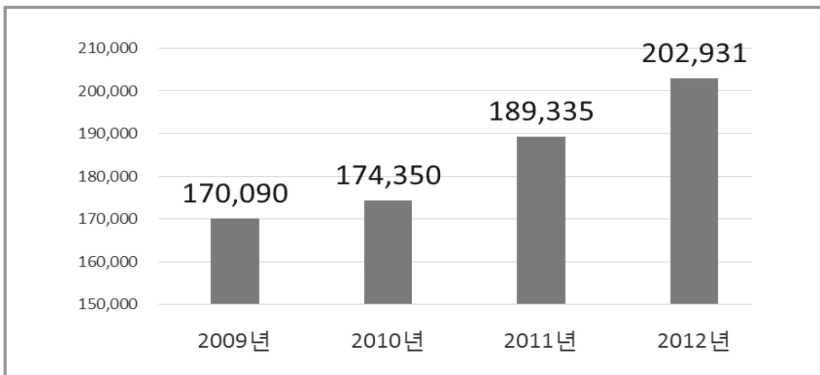


자료출처: 일본조선대학박재훈교수("조선경제현황"논문에서, 2013년9월6일)

구체적인 산업분야 경제성과를 보면 북한에는 제철산업과 화학공업을 국가산업의 두 개의 기둥으로 여기고 있다. 제철분야에서는 2009년 성진제철소의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철기술성공에 이어, 2015년 황해제철소에서는 무연탄 산소 제철기술개발성공으로 장시기 외국 코크스 수입에 의존하는 국면을 종말짓고 자력자강이라는 새로운 토대 하에 철강산업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흥·홍남 화학연합기업소를 대표로 하는 화학공업분야에서는 석탄의 가스화 개발에 이어 질소비료 생산에서도 상당한 증진을 보이고 있다.

자강도 회천연합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개발한 CNC 기술로 장시기 낙후된 제철공업과 발전소들의 설비개조가 개시되면서 CNC 기술이 기타 산업으로의 응용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인민생활개선을 구현하는 경공업분야에서 년 1,000만켈레 생산능력을 갖춘 평양 양말 공장이 기동, 김정숙방직공장에서는 가방천 국산화 생산에 성공 및 산업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전해진다. 평양현대화식료품

〈그림 2〉 질소비료생산증가률 (2009년~2012년)



자료출처: 일본조선대학박재훈교수("조선경제현황"논문에서, 2013년9월6일)

천연염색국산화 성공으로 장시기 외국수입으로만 가능했던 방직-침직 공장 가동, 평양대동강맥주 중국유럽 수출, 천년화장품 국산화 개발 성공 및 시장투입, 등등은 주민생활개선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백성들의 식생활과 직접 관련된 농업분야에서는 식량문제 안정화와 증대를 위하여 상당한 우량종자 개발 및 우량종자 파종면적 확대, 수십만헥타르 규격포전정리(800평방미터, 1,000평방미터)완료, 황해도 물길건설을 대표로 하는 전국 수백키로미터 자연흐름식 물길건설완료, 경운기, 비료, 농약, 박막 등 영농물자생산분야에서 뚜렷한 회복과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축산부분에서는 국영축산, 농장축산, 개인부업 축산을 병행하면서 세포지구의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기 축산업발전중에 사료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에서 인입한 종자로 북한의 풍토에 순화시켜 생산성과 영양가가 높은 “애국풀” 개발 성공으로 식량대용 사료문제 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열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수산분야에서는 지난 80년대중엽 인구당 차지하는 수산물량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던 목표를 회복하고자 새로운 어로체계와 어로 방법확립 물고기저장시설과 가공확대, 철갑상어와 대서양 연어 양식 성공을 바탕으로 800여종의 수산자원개발에서 더 많은 어종을 바다 양식, 강과 호수양식개발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밖에도 경공업과 농업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성과와 기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Ⅲ. 향후 북한경제 전망

지난 5월7일에 열린 북한노동당 7차대회는 새로운 김정은시대 진입을 명분화, 공식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측면에서 보면 고김정일의 선군정치시대가 김정은의 당중심의 새로운 시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김정일시대 강성국가(사상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전략의 중심을 군사강국건설에 두었다면 김정은시대 강성국가전략 중심은 서서히 경제강성국가로의 전변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노동당7차대표대회에서 향후 국가발전5개년 전략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있는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우리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 가지 국사가운데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라고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당대회의 김정은의 연설은 신년사의 연장선에서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인민생활향상을 제일국사로 한줄에 연결시키고 일원화함으로써 향후 전략적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특성상 선대의 유훈을 계승한다는 명분하에 주체사상의 존엄과 선군정치하에 핵무장강화, 국방건설강화를 우선시하는 제법을 사용하겠지만 지난 4년간 김정은의 대내적인 정책 취향을 살펴보면 인민생활향상을 목표로 한 경제건설 중심으로 기울어온 것만은 틀림없다. 인민생활문제를 제1국사로 내세운다는 표현은 인민생활향상을 취지로 하는 경제건설을 첫자리에 놓고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의 표징이다. 또한 2012년 4월 15일, 김일성탄생100주기 열병식에서 “우리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신념이다"의 연장선이고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지난 시기 북한은 선후로 두차례의 7개년계획을 제정 실시하였고 3차에 걸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실시한바 있지만 획기적인 인민생활의 경제변혁을 이룩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국가발전계획 자체가 중공업위주의 체계와 국방을 우선시하는 기조에서 제정실행되었기 때문에 국가경제실력 증장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인민생활 향상에 까지는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5개년 발전전략은 인민생활향상을 우선시하는 기조에서 제정실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4년간 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면서 광범위한 생산부분의 적극성이 고조되었고 생산효율이 대폭 증대되는 상황하에 시장활성화도 상당히 진척이 된 상황이고 광대한 백성들의 부의 욕망이 상당히 움터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그 기대효과가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미래 학자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서술하는 대목에 이런 말을 하였다. 중국당 쇼핑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10억 중국인들 가슴에 부의 욕망을 지퍼주었다는 점이다. 이 부의 욕망이 개혁 개방정책과 아울러 지난 30여년간 중국경제 급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지난 4년간의 대외교류확대 (제한된 개방), 관리제한조치실시(제한된 개혁) 하면서 광범한 백성들의 부의 욕망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시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북한식 개선조치확대와 새로운 탐색과 아울러 북한경제강성국가 건설이 획기적인 변화의 원동력으로 역할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북한 경제발전은 경제강성국가 건설 5개년 발전전략 맥락에서 추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경제강성국가전략에는 세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첫째, 경제강성국가는 수선 인민대중이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구현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경제강국이다. 이것은 경제강성국가 건설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되어있다.

둘째, 자립적민족경제 건설의 길, 자립으로 국건한 경제강국을 건설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강성국가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 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식경제산업시대 요구에 부합되는 지식경제강국이다. 이것은 경제강성국가 건설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생활문제를 제1국사로 세운다는 제기는 경제 강성국가건설의 핵심원칙의 구현이라 평가할 수 있는 바 지난 4년간 북한경제변화를 살펴보면 역시 인민생활개선과 향상을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해 온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2012년 원군부소속 다섯개 광산기업과 네개의 광산가공기업이 내각소속으로 전환시키고 상기 기업수입을 인민생활 개선분야에 돌렸다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실시될 5개년발전배경하에 북한경제변화 및 전망을 추의해보면 세계 방면으로 추정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인민생활을 제1국사”로 라는 취지에서 경공업과 농업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집중시도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지속적인 북한식 관리개선조치를 펴나갈 것이고 상당한 인력, 물력, 재력들을 집중하여 대폭적인 건설의 붐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그 어떤 영도자도 등극초기단계에서 백성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집정지속가능한 선택이라 볼 수 있는 외에 선대의 유훈이기도 하다.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제1차핵실험이후 강성국가전략중심을

경제강성국가건설전환을 지적한 바 있었다. 물론 전환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유훈으로 남겼다는 것은 후계자로서의 김정은은 무조건 받들고 실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이다.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9년 강성대국전략을 펴면서 2000년부터 8차례 중국을 방문고찰한 적이 있다. 2000년 제1차 방중시 김정일은 의례적으로 “중국개혁개방은 거대한 성과를 이루었는 바 덩쇼핑이 제기한 개혁개방노선은 정확하다. 북한은 이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표명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에 중국의 개혁개방경험을 배우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개혁개방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백성들의 생활개선을 첫순위에 놓아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이것이 바로 북한식 발전전략에 주는 중국경험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4년간 북한GDP평균성장율을 7% 이상으로 추적하고 있다면 향후 5년간 특수한 변수가 없다면 GDP성장율 8%~10%이 가능하다고 추정한다.

둘째, 자립자강의 기조에서 수입대체기업과 산업분야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집중시도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경제 강성국가전략에 자립적민족경제 세우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속에서 이것은 북한의 필연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장시기 주체사상틀에서 자립경제를 과분하게 강조하는 측면에서 대외경제교류가 소외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경제 기술발전수준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개별적 기업과 산업들에서는 자립자강으로 세계일류의 기업과 인재, 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향후 북한경제가 총체적인 수준에서는 세계적 수준과 지속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가겠지만

개별적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일류적인 분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셋째, 지식경제를 다그치는 북한식 경제발전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한다.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세기 산업혁명의 불꽃을 지펴 경제강상국가건설의 길로 나가자”라는 연설중 새로운 산업혁명을 북한식 이해로는 예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새세기 산업혁명은 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도약식 발전으로 풀이한다. 이런 취지에서 지식경제수준에 걸맞는 인력자원 보유를 위하여 2012년 9월 25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6차 전회를 열어 12년 국민 의무교육 실시를 공포한 바 있다. 이것은 지식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김정은의 비전을 알리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의무교육과 인적자질 수준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쳐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인적자원을 IT기술을 대표로 하는 고신기술산업에 접목시켜 산업화를 이끌어 낸다면 향후 북한경제발전은 새로운 양상을 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높은 교육수준과 인적자원이 고신기술 산업과 접목에는 상당한 중계과정이 필요한바 또한 이것을 어떻게 풀고 접목시키는가 하는 과제는 향후 북한이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가능성만은 충분히 가졌다고 확신하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식경제발전을 다그친다는 대목이 향후 북한경제발전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이고 우리가 각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IV. 결 론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로는 전략적인 변화로 보아야 한다. 둘째로는 경제회생과 재건이라는 포괄적인 변화의 시도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로는 스스로의 변화라고 보아야 한다.

최근 북한변화를 두고 국제사회는 긍정과 부정이 선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의 변화를 일시적 단기적 조치에 불과하지 않는 바 정권이 바뀌지 않는한 그 어떤 기대도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긍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의 변화를 북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차원의 전변으로 설명한다. 이 두가지 시각 차이에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대북정책 조절에서 부동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향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남북교류활성화 나아가서는 미래 동북아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지난 20여년간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는 줄곧 경제제재라는 카드로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지금까지 효과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는 “이율배반”이란 난제속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일한 명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북한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주장이유와 북한의 핵무장이유가 동일한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 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북한의 특수한 체제와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소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소통이 되려면 북한은 반드시 국제 사회와 교류속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가 변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하게 되고 사고방식이 변하면 소통이 쉬워지고 소통이 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상호적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고 또한 더욱 큰 변화를 이끌어내 북한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당면 국제사회가 고민해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¹⁸

[참고문헌]

리기성(북한), “인민생활향상을 제일구사로 내세우고 있는 조선”, 북한 사회과학원 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박사, 2016년 5월, 연변 대학학술회.

박재훈(일본), 조선경제현황, 2013년9월6일, 일본조선대학.

伊集院.敦, “냉전후의 조선경제연구(冷战后朝鲜经济研究)”, 2013년 7월, 박사학위논문.